

# 윤, 총선 민심 수용 민생 강조...쇄신방안 '미흡'

### ‘국무회의’ 메시지...일방 소통 비판 피하기 힘들어 조국혁신 “국민이 몰라봐 죄송하다 사과해야 하나” “포퓰리즘은 마약”...건전재정·구조개혁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집권여당의 4·10 총선 참패에 대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며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도 기존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협치 등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부 정책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성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우리의 미래와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건전 재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주식, 수출 등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며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에 야권에서는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총선 참패 메시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국민담화, 혹은 기자회견 등을 대통령실 내부에서 논의했으나 결국 무산되면서다.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윤 대통령의 일방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3800여 자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중 2800자 넘게 총선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는 데 할애했다.

대부분의 메시지는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으며 다만 ‘더’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미 서민의 삶을 챙기고 있고,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으나 그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판단을 한 이유도 발언에 담겼다. 기존 정책 방향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산업 정책,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이었으나 국민이 체감하지 못했다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해왔는데 국민이 체감 못 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며 “몰라 봐서 죄송하다고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 윤 대통령만 민심을 모른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고면서도 구체적인 국정 쇄신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내각 개편과 참모진 교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또 국회와 협력하겠다고면서도 영수회담 등에 대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과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총선 패배와 무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결심을 내보인 것이다. /뉴스

## 정부, 日공사 초치...‘독도는 日땅’ 항의 “우리 주권 하등의 영향 못 미쳐, 즉각 철회해야”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ске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 일부 내용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들어와 ‘(조지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까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강력 항의했다.

이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다만 논평 수위와 총괄공사 조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 논평에서 언급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예 빠졌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뉴스

## 광주 사회서비스 종사자 시민 ‘인권감수성 향상’ 추진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사업을 2026년까지 3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단계로 인권옹호 자문그룹을 구축하며 인권 관련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사업 체계를 마련한다.

2025년 2단계 사업으로 인권지원 사업 확장과 연구과제 설정 등 인권옹호 체계를 내실화하고, 2026년까지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인권옹호 지원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 광주 시민권옹호부즈맨, 변호사그룹, 현장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인권옹호 자문단을 구성 중이다.

또 자가 갑질 테스트 등 인권 자가 진단 파일을 사회서비스 현장에 보급해 인권 상식을 점검하고 일상 속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안에 전문가와 현장의 인권상담을 연계해 직접적인 인권옹호 지원사업을 하며, 종사자 힐링 워크숍, 인권 슬로건 공모전, 인권의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 전남도의회, 전세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광일(여수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교육·홍보,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과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남에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월21일 현재 1만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 피해자는 20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평목항서 세월호 희생자 기리는 풍물패 진도소포길군농악보존회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오후 진도군 임회면 평목항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연주를 하고 있다.

## ‘광주시민이 평가하는 시민단체’ 설문조사...단체들 “부적절”

### 광주는 19일까지 진행...2870명 참여

광주NGO지원센터가 지역의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과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설문 참여자들은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NGO지원센터 의뢰로 인터넷 사이트 ‘시민광장 광주온(ON)’을 통해 지역에 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의 인식정도를 묻는 “당신이 생각하는 광주시민단체는?” 설문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5일 게시된 설문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880명이 참여했으며 오는 19일까지 진행된 뒤 결과를 공개한다.

설문은 11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시민단체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어 ‘시민단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항을 통해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전문성’ ‘지역문제 발굴과 대안 제시 여부’ ‘소통노력’ ‘민주주의 발전 기여’ ‘행정과 민간의 협력을 돕는지’ 등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등으로 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시민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지’ 여부를 비롯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활동 이유’ ‘참여하고 싶은 분야(환경·인권·통일·여성·청소년·언론·정치) 등을 묻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NGO지원센터 인자여부와 센터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쳐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설문을 마친 참여자들은 댓글을 통해 “광주도 타 도시와 같이 균형발

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단체가 꼭 필요하다. 정의와 시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부 참여자는 “시민사회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스웨덴처럼 많은 시민이 단체에 가입해 정부와 정치·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설문조사에 대해 시민단체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광주온이 예전부터 설문조사를 가장한 시정 또는 입장을 홍보했었다”며 “이번 설문조제를 통해 광주시가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아주 강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 국민의힘 ‘실무형’ 비대위 구성...전대 준비 분주

### 윤재옥 원내대가 비대위 구성...내달 초까지

22대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이 생긴 국민의힘은 16일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내달 초까지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꾸린 뒤, 이후 선출되는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넘길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당선자 총회를 열고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

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구성이 필수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2대 당선자 총회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5월 초순경에 당선자 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가) 운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분간 비대위

를 맡는 것은 국회의 여야 대치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2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나섰다

고, 신인 원내대표를 선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당선자 총회를 마치고 나온 뒤 “차기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다”면서도 “야당이 2일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니, 이때까지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 당대표 연임 저울질...野 이재명만 보인다

### 대권주자 사리진 민주당...김부겸·임종석·김두관 등 원외로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달성하며 대승을 거뒀지만 원내에 입성한 당선자들 가운데 이재명 대표 외에 대권 주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당내 대권 주자로 볼 수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은 모두 원외 인사로 남았다. 이 대표에게 힘이 실려 건강관계를 우려하면서 야당과의 대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권 주자가 대부분 원외에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당대표직 연임을 저울질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당대표 연임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다면 당권을 쥐고 대권으로 직행하겠다는 의도도 해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 전 총리, 임 전 실장, 이 전 사무총장 등은 총선 이후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무총리 퇴임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 전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당의 부름을 받고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김 전 총리는 선대위에 합류하면

서 “친명이나 친문이니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내 버리자”며 화합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합류로 정계에 복귀한 김 전 총리가 총선 압승에 큰 공을 세웠다는 명분을 내세워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 예상도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지도부의 선대위 합류 요청에 백의종군 의사를 밝히고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 등 격전지를 찾아 지원에 나섰다. 친문계 핵심인 임 전 실장이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정권심판론 단일대오를 형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임 전 실장은 원내 입성은 실패했지만 총선 승리에 기여함으로써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했다. 그는 8월 정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주요 인사로 꼽힌다.

당내에서 부산·경남(PK) 지역의 맹주로 자리 잡은 김두관 의원도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빼어난 일격을 당하며 3선 도전에 실패했다.

이 전 사무총장과 김 의원은 향후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입성을 다시 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8월 정당대회 출마설이 재검토되고 있다.

## 조국, 평산-봉하마을 행보...친문-친노 세결집

### “문재인·권양숙 모두 격려 말씀...새기고 노력하겠다”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정권 심판이란 선행적 메시지 부각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특히 친노와 친문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4·10 총선 후 6일이 지난 16일 기준으로 돌아보면 조국혁신당은 총선 바로 다음 날인 11일 첫 공식 일정보도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촉구,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일성을 냈다.

지난 14일엔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에게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달라는 공개 메시지도 전했다.

전날(15일)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봉하마을에서의 일정보다 소환했다. 다음주에는 전주와 광주 등 호남을 찾아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행보를 두고 조국혁신당이 친노, 친문 세력의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조 대표와 당선인

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이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섰다. 정권 심판 바람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자부심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정당의 리더십과 문화 보여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대통령께서 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과제인 검찰개혁과 민생·복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양숙 여사를 비공개로 예방한 뒤엔 문 전 대통령과 권 여사 모두 조국혁신당이 해야 할 일이 많이라며 격려 말씀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저희는 두 분 말씀을 귀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더욱 더 의정활동 그리고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향한 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격려, 그리고 그들의 격려를 새기고 노력하겠다는 부분 자체가 친노, 친문 세력에 상징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뉴스